



■ 발 표 2.

# 일본 노동자협동조합의 시사점과 우리의 과제

문 보 경

사회투자지원재단 (부설)

사회경제연구센터 부소장





# 일본 노동자협동조합의 시사점과 우리의 과제

문보경 (사회투자지원재단 (부설)사회적경제연구센터 부소장)

## 시작하는 글

필자가 일본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와 협동총합연구소<sup>22)</sup>를 알게 된 것은 노동자기업인수지원센터를 개소 한 1998년 여름 즈음으로 기억하고 있다. 정확히 제목도 기억하지 못하는 간담회 자리에서 노동자기업인수지원센터의 활동을 설명했던 게 기억이 나고, 협동총합연구소 분들과 논골협동조합을 방문했던 것이 기억이 난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한·일 노동자협동조합의 교류였던 것 같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을 계기로 일본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 및 협동총합연구소와 해후를 하였고, 그 인연이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년 제정, 2000년 시행), 사회적기업육성법(2006년 제정, 2007년 시행), 협동조합기본법(2011년 제정, 2012년 시행)이 제정이 되었다. IMF 이후에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고단하고, 경제적 어려움은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기존의 질서와 다른 새로운 해법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실이기도 하다. 자활공동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경제 사업 조직의 이름을 달리 하고 있지만, 이들은 자본 중심의 시장 경쟁적 기업 활동과는 달리 상호협력에 의한 공동체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활동 방식을 전제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일련의 제도화 과정은 시민사회운동 진영에서 시도해 온 대안적 경제 활동 방식의 사회적 가치가 인정된 결과이며, 사회적경제 주체의 성장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주도성이 강하게 작용한 제도화 과정은 사회적 경제를 실천하는 주체들의 자기 발전 전략의 수립과 그 실천을 약화시키는 기제가 되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가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자기 주도성을 회복과 협동조합의 내실 있는 성장에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일본노동자협동조합운동에 일천한 필자에게 김홍일 신부님의 앞선 발표문은 단비가 되었고, 그 글을 안내서 삼아 발제문을 작성하였음을 밝힌다.

## 1. 일본노동자협동조합운동의 탄생과 역사<sup>22)</sup>

일본노동자협동조합의 탄생은 그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실업자 노동운동 조직, 전국일본자유노동조합(全國 日本 自由労働組合)(이후 전일자노)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패전은 전시경제체제하 일본의 중심산업이었던 군수산업의 몰락을 초래하였고 그로인한 대량실업은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당시 전체 실업자 70만 명 가운데 40만 명으로 구성된 전일자노는 실업자들의 취로확보와 생존권을 위한 싸움을 지속해 나갔다.

22) 김홍일(2012.7) 「일본노동자협동조합 운동이 한국 사회적 경제 운동에 주는 시사점」- 2012 세계 협동조합의 해 한국주간 행사 자활포럼 “노동자협동조합 전망 모색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원문 인용

일본노동자협동조합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중·고년 복지사업단은 이 전일자노의 '실업자투쟁' 속에서 탄생되었다. 정부에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중·고년 취로사업'은 일본정부의 입장에서 한편으로 실업자들의 임시적인 취로와 생계보호라는 일정한 효과를 얻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취로사업의 실시가 자연스러운 노동자들의 결집과 노동조합의 조직화를 촉진시키는 촉매로 활용되었다. 취로사업으로 모이고 조직된 노동자들이 취로일수와 단가를 둘러싸고 정부에 저항하는 상황이 잦아지면서 마침내 일본정부는 1971년 취로사업의 폐지를 검토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게 되었다.

신규취로가 정지된 이 같은 상황에 대하여 전일자노는 실업자를 조직하여 직업안정과 자치체에 취로보장을 요구하였다. 이 교섭으로부터 실업노동자들이 스스로 관리하는 사업단에 자치체가 일을 주고 사업단이 이를 운영하는 '사업단 방식'에 대한 합의가 서궁(西宮), 경도(京都) 애화(愛和) 동경(東京) 삼립(三笠) 호별(芦別) 등의 자치체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노동자협동조합의 전신인 사업단운동의 출발점을 이루고 있다.

사업단 탄생의 배경을 이루는 또 하나의 요인은 전일자노가 '민주적 개혁'을 실천하여 새로운 노동조합의 노선과 체질을 형성해 왔던 점이다. 즉 노동성의 실업대책사업 폐지에 대하여 '지역과 주민에게 유용한 실업대책'에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노동조합은 생활도로의 보수(補修)나 학교 풀(Pool)의 형성 등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을 차차 사업계획으로 담아내고 사업단이 자각적인 취로규율 아래 그것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지역에서의 실천경험을 바탕으로 두 번의 오일쇼크를 치렀던 1979년에 '중·고령복지사업단 전국협의회'가 결성되었다. 이 같은 전국협의회의 결성은 전일자노 제 14회 대회 결정에 기초한 것으로서 이 대회에서 사업단은 실업대책 재확립 투쟁과 민주적 개혁, 실업자 투쟁 속에서 새롭게 고용창출을 자신의 손으로 이루고 실업대책 사업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47개 사업단을 설립해 온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후 사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익의 입장에서 사업 활동을 통하여 중·고령자 장애자 등의 고용을 창출하고 전국적으로 실업자를 결집하여 실업자투쟁을 발전시키는 하나의 거점을 건설함과 동시에 고령자·장애자가 안심하고 오게 하는 복지활동을 지향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사업단의 활동에 관해서도

- 1) 편협한 경영주의, 이기주의와 부리고 부려지는 관계가 아니고,
- 2) 민주적 개혁, 지역형성의 입장, 경제민주주의 방향에서 지도적 역할을 맡으며,
- 3) 노동자로서의 자각을 높여 실업자투쟁, 고령자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한다는 원칙을 세워나갔다.

무엇보다 전국협의회 결성에 즈음하여 '사업단 7대 원칙'이 정해진 것은 결정적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그간 해고노동자들을 위한 몇 가지 사업을 수행하던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자본주의적 기업으로의 변질 경향을 반성하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과 사업단의 이념과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사업단이 노동자협동조합으로 발전하여 간 근거는 이때 주어졌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전국협의회가 만들어지고 1년여인 1980년 12월 정부의 '실업대책 제도조사연구회'는 이후 실업대책 제도에 관하여 1985년까지 65세선으로 정년을 정하고 실업대책을 기본적으로 종식시킨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것은 취로보장에 대한 공적임무와 고령자의 노동권을 부정하는 하는 것으로 사업단은 이때부터 공적 취로보장 요구와 병행하여 중·고령자의 직장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사업, 경영의 수준을 높이고 민간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중점업종도 확립되지 못하고 중·고령자가 할 수

있는 적당한 일이 나오지 않는 곳이 많았으며 문을 열자마자 닫아야 하는 사업소도 생겼고 그나마 안정권에 진입한 사업소에서는 자본주의 기업화되어 가는 현상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사업단의 사업, 운동의 전기를 마련했던 것이 직할사업단의 활동이었는데 82년 7월 동갈병원에서 청소, 설비관리 등의 빌딩관리용역을 19명이 시작한 것을 필두로 해마다 전국으로 사업단을 확대하되 사업고도 82년 3천만, 83년 1억, 84년 2억 4천만, 85년 5억으로 매우 빠르게 증가하였다. 직할 사업단은 이 과제를 훌륭하게 달성하였고 사업단운동의 새로운 질을 개척하였다 이러한 성공은 노동자의 팀워크와 자발성이 기초가 되는 사업분야에서 협동조합이 갖는 민간기업과의 경쟁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대상도 고령자나 완전실업자만이 아니라 팽배한 불안정 취업층으로 크게 확대시키는 전기가 되었다. 이 당시 사업단의 이념을 철저히 지키면서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였던 점과 젊은 인재를 양성하여 전국에 배치하여 나갔던 점은 성공의 주요한 배경이 되었다.

이러한 성장을 바탕으로 85년부터는 생활협동조합들과의 제휴사업이 시작되었고 몇몇 지역에서는 자원 재활용 사업단 조직되는가 하면 재가 서비스나 노인 급식 등 지역에 유익한 사업을 스스로 기획, 실행하는 모델들을 만들어 내었다.

사업단의 내용과 규모가 성장하면서 연합회는 사업단의 위상과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들은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의 선진적인 경험을 연구하면서 사업단의 본질과 방향이 '노동자협동조합'이라는 사실을 점차 명확하게 의식하게 되었다. 89년 제 7회 총회는 이 사실을 정식으로 확인하고 노동자협동조합으로서 각 단 조직을 재편함과 함께 전국협의회를 연합회로 이행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처럼 '중·고년 복지사업단'에서 '노동자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명확히 함으로써 얻은 비약적인 변화의 하나는 노동자협동조합에 대한 열렬한 반향과 공감을 불러일으켜 새로운 제휴의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첫째로는 도산, 합리화 공격에 대항하여 노동자의 지혜와 긍지를 걸고 여러가지 산업, 업종에서 이어져 온 자주생산활동이 노동자협동조합의 깃발 아래 결집하게 되고 사업, 운동에서의 제휴를 지향하게 된 것이다. 둘째, 노동자협동조합이 생활협동조합 등 선행된 다른 협동조합들로 부터 지지를 얻어 협동조합간의 제휴 속에서 비약적인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협동을 지향하는 개인과 단체들과 함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 2. 일본노동자협동조합의 이념<sup>23)</sup>

生命, 労働, 地域の 再生!

일본노동자협동조합 안내책자의 가장 첫 장에 씌여진 7개의 원칙과 함께 적혀 있는 글 귀이다. 생명과 노동과 지역을 새롭게 살리는 것이 노동자협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이념과 목표라고 한다면 7개의 원칙은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동자협동조합이 지켜야 하는 강령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이야기한대로 이 7개의 원칙은 일본노동자협동조합이 오랜 역사적 경험과 실천을 통하여 도달한 귀결점으로 이 원칙은 하나의 관

23) 김홍일(2012.7) 「일본노동자협동조합 운동이 한국 사회적 경제 운동에 주는 시사점」 원문 인용. 김홍일 신부 글에 수록된 일본노동자협동조합 원칙은 1986년에 제정 당시의 내용임을 일러둔다.

념이 아니라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칙이라는 것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 **노동자협동조합 7개 원칙**

### **- 진보적인 생활방식, 활동방식의 목적을 위해 -**

노동자협동조합은 철저한 민주주의를 통해서 노동자가 '기업의 주인되기' '좋은 일'을 자각적으로 추진하면서 '자립과 협동과 사랑'의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진보적인 활동방식을 지향한다.

**제1원칙 '철저한 민주주의'를 통해서 노동자가 기업의 주인이 된다.**

모든 조합원은 노동과 출자를 조합원의 최저 자격요건으로 하며 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알 권리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조합에서는 회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철저한 회의를 원칙으로 총회를 적어도 1년에 한번 개최하고 사업소와 직장회의를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회의를 통한 조합원의 납득과 합의는 운동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다.

**제2원칙 좋은 일을 하고 공동체를 만들기에 공헌한다.**

일의 의미와 전체적인 체계를 함께 상의하고 이해함으로 책임있게 일을 추진한다. 조합의 이념을 확대하고 하청업체와는 협동 파트너 관계를 유지한다. 지역과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기술을 향상시키고 인재를 모아 사업의 고도화, 복합화에 노력한다.

**제3원칙 모두가 출자하고 사업계획을 만들며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생활을 향상시킨다.**

사업자금의 조달과 사업계획의 수립에 전조합원이 협력·참여하며 사업을 확대하는데 있어서도 지혜와 정보를 함께 나누고 노동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한다. 보수는 같은 업종 노동자의 임금과 균형을 맞추며 조합 내부의 필요한 격차는 조합원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제4원칙 노동과 교육을 기초로 '자립과 노동과 사랑'의 인간으로 성장한다.**

동료들과의 공동체 형성에 함께 힘쓰며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자기 의견을 분명히 이야기한다. 사업 수입의 일정 부분을 반드시 교육비에 돌리고 학습의 기회를 전 조합원에게 보장하며 모든 조합원은 조합 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노동자협동조합의 이념·목적·원칙 및 경영지식을 학습하며 조합원이 풍부한 문화·예술에 접근하는 기회를 확대한다.

**제5원칙 전국적 관점과 변혁적 입장에서 협동조합운동을 발전시킨다.**

전국연합회기관지를 조합원이 구독하고 함께 읽는다. 노동자협동조합과 협동조합 그룹 간의 연대와 협력에 힘쓰며 지역사업과 운동에 함께 한다.

**제6원칙 노동조합운동과 지역운동과의 연대를 강화한다.**

노동자의 생활과 권리향상을 위해 노동조합과의 협동과 연대를 강화한다. 일본경제를 노동자와 국민본위로 변혁하는 운동에 일익을 담당한다.

**제7원칙 인류의 위기를 극복하는 운동을 추진하는 국제연대를 강화한다.**

'인류의 위기'와 그것을 극복하는 '협동의 이념'에 관한 이해를 끊임없이 강화한다. 1차 산업을 수호하고 사회적 서비스와 문화, 교육 등을 직업적으로 확립하고 소비형 경제에서 건전한 균형경제로 이행을 추구한다. 노동자협동조합운동의 국제연대를 강화한다.

### 3. 한 · 일 노동자협동조합 운동 비교<sup>24)</sup>

	일본노동자협동조합	한국노동자협동조합
태동	1971년 취로사업의 폐지 후 실업자·고령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단 탄생	1980년대 말, 도시빈민지역의 생산공동체등장, 90년대 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생산공동체, 노동자협동조합 시도
발전	1980년대 들어 노동자의 협동 경영에 대한 문제를 고민, 1983년 이탈리아에 조사단 파견, 1986년 노동자협동조합으로 조직 발전 방향을 결정.	생산공동체 운동은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영향을 미치고(1996년 ~ 1999년 시범자활사업전개), 자활공동체라는 제도화 된 공동창업으로 발전
	1987년 노동자협동조합 모델로 '센터 사업단' 설립 1995년 고령자협동조합 탄생 후 전국으로 확산	불안정한 고용조건에 놓인 빈곤계층(차상위계층)의 생산공동체가 자활사업의 제도화 이후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자활에 초점이 두어짐.
현황	○ 조합원 : 49,205명(2010.3.31현재)	○ 자활공동체 <sup>25)</sup> : 1,200개(2010. 12 기준)

24) 오카야스 기사부로(2012.7) 「협동조합은 오늘의 대안일 수 있는가? - 일본 '워커즈 코프'의 경험에서-」 2012 세계 협동조합의 해 한국주간행사 자활포럼 “노동자협동조합 전망 모색을 위한 토론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경기광역자활센터(2011.8)「협동조합적 자활공동체 운영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대안기업연합회 소개 자료, 필자의 한국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 사무국 수탁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

	<p>이 중 취로 조합원 : 11,867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원 사업액 총계 : 270억 370엔</li> <li>○ 주요사업내용 : 고령자복지, 취업지원, 육아지원, 건물종합관리, 식·농·환경 관련, 협동조합 간의 제휴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주민 : 약 8,500명<sup>26)</sup>(2010.12 기준)</li> <li>○ 주요 사업 내용 : 취업 지원, 외식, 급식, 돌봄 서비스, 영농, 청소, 주거복지, 재활용, 세차, 교육, 공예, 봉제 등</li> </ul>
연합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79년 ‘전국협의회’결성 : 니시노미야(관서지방), 키타큐슈(북구주지방) 등지에서 실업자·고령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단 36개</li> <li>○ 1986년 : 전국협의회 → 노협연합 회로 방향 결정</li> <li>○ 1992년 ICA가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3년 ‘한국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 결성 : 집수리, 봉제, 청소, 재활용 등 분야의 시범자활사업단 및 자활공동체가 기반</li> <li>○ 2007년 10월 한국대안기업연합회로 명칭개정에 따른 재창립 총회</li> <li>○ 2008년 12월 CICOPA 가입</li> <li>○ 2009년 8월 ICA 가입신청(현재 준회원)</li> <li>○ 노협 및 노협연합회 추진단 구성</li> </ul>

- 일본의 노동자협동조합은 노동운동 조직을 기반으로 실업자의 일자리 확보와 생존권 투쟁 속에서 형성되었으며, 한국의 노동자협동조합은 빈민지역에서의 사회선교활동을 기반으로 시도된 주민공동체운동에 그 뿌리를 두고 형성되었다.
- 일본과 한국 모두 실업 대책이라는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경험하였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실업자노조를 기반으로 당사자들의 주체성을 강화하면서 노동자협동조합운동으로 성장을 한 반면, 한국의 경우 제도화를 계기로 정부의 주도성과 지원조직 중심성이 강하게 작용해 당사자들에 의한 자기 발전이 미약했었다.
-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통해 노동자협동조합으로 발전 해 가는데 있어서, 주체의 발전 전략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한다. 자기 정체성 확립을 위한 문제의식과 그 해결을 위한 운영원칙의 수립이나, 사회 환경에 조응하기 위한 체질개선 및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등은 일본에서 노동자협동조합운동이 성장하는데 커다란 동력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반면 한국의 경우 정부 주도성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제도 내에 위치하고 있어 자기 정체성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당사자들의 주도성을 강화하고, 정부의 개입과 간섭에 대해 교섭력을 확보해야 하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다.
- 노동자협동조합과 관련한 제도적 환경 측면에서는 한국의 경우 보다 유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다. 노동

25) 자활공동체와 노동자협동조합은 실체적으로 다르나, 제도화 이전의 맥락을 전제로 자활공동체를 노협의 맥을 잇는 경제 조직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노협연합회의 주된 조합원이 자활공동체에 기초하고 있는 현실 반영함.

26)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경기광역자활센터(2011.8) 「협동조합적 자활공동체 운영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중 경기도 소재의 자활공동체 운영현황 분석에서 제시한 월평균 참여 인원수를 기준으로 추정.



자협동조합의 자유로운 설립과 시장에서의 차별 배제라는 정책 기조에 힘입어 노동자협동조합의 양적 성장과 활성화를 기대 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제껏 노동자협동조합이 활성화 되지 못한 이유가 관련 제도의 부재에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이 노동자협동조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수준은 매우 명확하다.

- 일본과 한국의 노동자협동조합은 ICA에 가입해 국제교류 활동을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이탈리아와의 오랜 교류와 이탈리아에 대한 꾸준한 연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의 노동자협동조합 진영도 몇 년 전부터 ICA 총회에 참석하기 시작했으며, 국제협력위원을 두고 국제동향과 교류에 힘쓰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과 일본의 지속적인 교류 및 상호 협력, 나아가 한·일 공동연구 활동을 기대해 본다.

## 4. 일본 노동자협동조합 운동의 성공 요인

지난 7월에 있었던 “노동자협동조합 전망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홍일 신부는 발제문을 통해 일본노동자협동조합의 성공요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일본노동자 협동조합에서는 자신들의 이 같은 성공의 요인을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는 사람과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일을 늘 사업의 중심에 설정하고 전국적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지역만들기에 노력하였던 점이다. 이 같은 노력은 자치단체의 지원과 지역주민의 지지를 얻어 나가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둘째는 주체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점이다. 특별히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과 조합원들의 교육을 위한 투자는 매우 돋보이는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노동자 협동조합은 총 수익금의 25%를 본부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데 25% 가운데 6%를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비로 지출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본부는 각 대학을 돌며 노동자협동조합을 선전하고 그 과정을 통하여 뜻을 함께 할 전문인력들을 양성하고 있다. 일반조합원을 위한 교육은 가입 시 3일간의 의무적인 연수 프로그램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교육은 노동을 통한 교육이며 연합회에서 발행되는 신문을 조합원들이 함께 읽고 토론하는 일과 철저한 회의가 교육의 골간을 이룬다.

셋째는 광범위한 노동자와 시민의 참여와 자치단체의 인지와 승인을 유도하여 나갔던 점이다. 특별히 이 점에서 노동자협동조합의 지역만들기는 지역사회 고용창출과 지역사회 개발에 새로운 자극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은 ‘공감(共感)의 경영’에 있었다고 하겠다. 노동자 스스로는 물론이고 일반 시민이나 소비자의 입장에서라도 공감을 얻어 낼 수 있는 운영원칙을 지켜왔던 점은 성공의 가장 중한 요인이 되었다.

성공 요인은 국가를 초월해 보편성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경제를 실천하는 주체들이 고민하는 내용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지역의 성공 사례나, 모범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점과 다르지 않다.

일본노동자협동조합 운동의 성공요인에 대해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꾸준하게 긴 세월을 견디어 낸 사람’이 있었다는 점이다. 해외 사례를 직접 접할 기회가 많아 진 요즘, 우리는 각종 사례와 정보의 바다에 빠

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그것을 일궈 낸 사람들의 노력 보다는 주어진 환경에만 관심이 쏠려 있다는 것이다. 특히나 상호협력과 신뢰가 바탕이 되는 노동자협동조합에서 그것을 일궈고, 가꾸어 낸 사람의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당장의 성과에 영향 받는 조급함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 5. 노동자협동조합의 성장과 활성화를 위한 과제

앞서 소개했듯이 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를 전신으로 하는 한국대안기업연합회(회장 권운혁 (주)컴윈 대표)가 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노동자협동조합 설립을 촉진하고 나아가 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의 구심으로 역할 하고자 한다.

대안기업연합회의 조직 과제와 사회적 역할을 수립하는 과정은 최근 집중된 논의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진솔한 자기 성찰 과정이 함께 병행되었다.

노동자협동조합을 주된 과제로 고민하고 있는 대안기업연합회의 과제 인식은 노동자협동조합을 고민하고 추진하려는 주체들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판단되기 때문에 최근의 논의를 바탕으로 과제를 정리한다.

### ○ 제도 의존성에서 벗어나자.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과 시행의 경험을 볼 때, 주체의 자기 필요와 그에 따른 자기 발전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노동자협동조합을 하는 주체의 필요와 이유가 명확해야 한다. 법 제정으로 유리한 환경이 마련되어서라는 이유는 하나의 동기 일 뿐이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은 바는 제도 활용론이라는 관점은 주체가 바로 서있지 않을 경우 실리주의로 빠지게 하거나, 제도 및 정책에 좌우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 제정은 계기일 뿐, 노동자협동조합을 성장시키는 주된 동력이 되지 못함을 다시 한 번 상기하자.

### ○ 당사자의 주도성을 강화하자

현재의 자활사업이나 사회적기업이 그러하듯이 주민 당사자들의 자발성과 주도성 보다는 지원조직의 양적 팽창과 영향력을 확대해 오는 과정으로 왜곡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당사자의 역량 강화와 상호지원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주민에 대한 교육과 조직화는 일원화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가장 현실적인 문제에 답을 할 수 있는 교육이 자리 잡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주민의 주도성 · 주민의 자기 결정권 · 주민의 자기 책임성 강화 없이 노동자협동조합의 성장은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이념적 지향을 넘어 주민들의 현실적 필요와 해결에 노동자협동조합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실증적인 방법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과 업종을 중심으로 컨소시엄조직이 자리 잡은 조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자협동조합의 설립, 역량강화, 사업 지원 등에 대해 컨소시엄조직의 역할을 강화하고, 그 성과가 회원사 확대에 귀착될 수 있는 순환구조를 마련하는데 주력하여야 한다.

○ 연대를 통한 노동자협동에 대한 확산을 모색하자.

노동자협동조합은 누구에게도 개방되어 있으며, 협동을 통해 공동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협동조합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접근 할 수 있도록 계기를 부여하고, 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의 청년 창업, 퇴사를 앞둔 노동자, 재창업을 준비하는 자영업자, 실직자 등 그 주체는 매우 다양하다. 특히 장기적으로 노동운동진영과 노동조합의 관심을 이끌어 내는 것은 실업자운동의 조직화 과정에서 단절되었던 사회적경제의 활동 주체와의 연대의 고리를 다시 잇는 시도가 될 것이라 여긴다.

○ 사회적경제의 구체적 상으로서 노동자협동조합의 위상을 부여하자.

사회적경제 담론이 우리 사회에 급속하게 퍼진 것은 최근 3년으로, 정부와 자치단체의 정책이 한 몫을 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IMF 이후 대안적 경제 활동을 모색해 온 시민사회운동진영의 노력이 그 바탕이 된 것으로 성과라고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제정을 계기로 시민사회진영의 주도성이 약화된 것 또한 사실이다.

시민사회진영의 주도성 약화는 사회적경제의 구체적 상을 실현하지 못하는 자치단체의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추상적 담론으로 사회적경제를 머물게 하고 있는 현상에 영향을 주고 있다. 노동자협동조합은 지역 주민들이 사회적경제를 체감 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조직형태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현재 정책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기업, 마을공동체 등은 병렬적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이를 협동조합 조직형태로 접근할 경우 통합성을 지향할 수 있다. 나아가 조합원주의를 극복하고 지역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의 접근 수단으로 협동조합을 채택할 경우 사회적경제는 지역에서, 주민들의 삶 속에서 하나의 행동 양식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라 기대한다.